

■광주·전남 불탈법 20건 적발

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50일 남는 가운데 벌써부터 불법·탈법 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농·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가 부정선거 추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선거가 임박한 2월 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탈법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 농·수·축협·산림조합장 198명을 뽑는 이번 동시선거는 농협과 산림조합에 이어 마지막으로 수협의 임직원 및 공직 등의 사퇴 시한이었던 지난 19일까지 10여명의 관련 임직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50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뜻을 세우고 있어 평균 3대1일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20일 현재까지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조치된 사례가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5건 등 20건에 이른다.

이번 동시선거를 두고 '3억원 당선, 2억

원 낙선'이라는 말이 공연연히 나돌고 있어 후보자간 고소고발 사태 등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입후보 예정자는 이번 선거가 선거일 13일 전까지 후보자도 공개 안 되는 '깜깜이'선거가 될 우려가 높고 선거

운동방식도 제한적이어서 현직에만 유리한 선거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선거 규정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이 오는 2월 24~25일 후보자 등록을 해도 선거법상 시한인 2월 26일 이전에는 이를 공개해선 안 되며 또 선거운동기간(2월 26일~3월 10일)에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으며 선거벽도 역시 조합 사무실 등에만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론회와 연설회 등 상호 공약을 비교하거나 후보를 검증하는 선거운동 방식도 조합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협 등 선거 관계자들은 입후보자의 공직 등의 사퇴 시한이었던 19일까지 사퇴자가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주 지역 한 입후보 예정자는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운동 방식 때문에 출

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입후보도 알리지 못하고 선거운동도 제한하는 이번 선거 방식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하소연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를 50일 앞두고 20일을 기해 'D-50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선거지도와 관리업무에 들어갔다. 기존 선거관리 전담기구를 선거관리상황실로 재편·운영하고 중앙본부뿐만 아니라 지역본부별로 야간근무와 주말 상황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설을 앞두고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활성화, 기부행위 위반사례 지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當2落” 조합장 선거 벌써 혼탁

〈3억 쓰면 당선·2억 쓰면 낙선〉

예비후보 등록 절차 없고 정보도 ‘깜깜이’... “현직에 절대 유리” 불만

“나주를 전력수도로” 한전 2622억 투입

조환익 사장 기자회견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지역 진흥사업과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26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관련기사 2면>

조환익 한전 사장은 20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2015년 지역 진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나주 이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업, 대학, 주민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유치·육성,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 지역 상생협력 등 3대 분야 38개 세부사업에 1274억원과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1348억원 등 26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역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66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육성펀드 2000억원을 조성해 출연금 이자 수익 50억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분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0억원이 투입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센터는 기업 이전과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에서 열린 ‘동반성장 Festival’

을 오는 10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어 한전과 협력업체의 성과를 전시할 계획이다.

지역대학과 한전 해외 사업에 필요한 에너지 특화 전문인재를 육성하는데 619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를 추진하고 ‘빛가람 국제발명대전’을 열 계획이다. 지역 학생을 위한 꿈나무 장학금을 신설해 11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문화·환경분야에 589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공항, 역, 터미널 등 광주·전남 주요 거점지역에 전기차·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만들고 전력거래소, 한전 KPS, 한전 KDN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Smart Grid Station)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전과 지역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성과를 만들 계획”이라며 “한전이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고 이 지역을 에너지 허브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극성 ▶6면
시간 속을 걷다 ‘광주극장’ ▶18면



성남 광주 KTX 관주역 진입대책위원회와 광주 북구 및 구의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20일 오후 관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고속철도 본연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며 서대전역 경우 철도와 관주역 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규기자 jeans@kwangju.co.kr

KTX ‘호남-대전’ 갈등 비화... 국토부는 ‘불구경’

권선택 대전시장 “서대전역 정차 편수 50% 관철 총력”

광주·전남·전북 반발 확산...충북 시민단체도 반대 합류

오는 3월 개통하는 호남고속철(KTX)의 서대전역 경우 논란이 ‘호남-대전-충남간’ 지역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같은 충청권 내에서도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대전역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충청권 내 여론도 분열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국토교통부는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듯한 안일한 행정 행태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권선택 대전시

장은 지난 19일 대전시 기자회견에서 열린 서대전역 간담회에서 “시장 후보 당시 (호남선 KTX) 서대전역 정차 편수가 절반 정도는 돼야한다고 했던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이를 위한 물밑작업도 많이 하고 있다. 전 문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해 정차 횟수 50% 유지라는 (대전)지역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켜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의 주장은 국토부가 지난 15일 밝힌 호남선 KTX의 20%를 서대전역으

로 경우시키겠다는 계획을 뛰어넘어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현실화할 경우 호남선 KTX는 사실상 저속철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 충북지역 시민 사회단체인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2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와 공동 성명을 내 “호남고속철의 건설목적에 역행하는 서대전 정차와 관련된 모든 논의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이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우를 반대하는 것은 KTX 오송(충북)분기역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서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정치권도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5년부터 KTX의 개통을 기다려온 호남권 주민의 과도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서대전역 우회 운행 방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X 관주역진입대책위원회와 광주 북구·의회는 이날 관주역 앞에서 호남선 KTX의 관주역 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우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진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인생의 골든타임을 전남대학교와 함께!

지방대 중에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10명 중 6명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주,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시행으로 취업의 문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 유지취임을 호남권 1위 (졸업생 1,000명 이상 일반대)
- 재학생 대학생활만족도 국립대 1위 (2013년 중앙일보)
- 논문 인용 횟수 국립대 1위 (QS-조선일보 2014대학평가)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수 지방대 1위, 전국 9위 (2014 국가직포)
- 2014년 취업률 거점 국립대 3위 (대학정보공시 알리미)
- 대형 국책연구과제 수주액 2,000억 돌파 (2013~2014년)
- 지방대특성화사업 7개 사업단 선정 (교육부 5년 295억 지원)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국립대 1위 (교육부 2014년)

입학안내 1-Click 서비스
http://ao.jnu.ac.kr
☎ 062-530-1043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